

기술형입찰 상반기 '2兆 물량' 주인 가린다

1000억이상 8건 설계심의 잇따라... 대형사 총력전

대형건설사들이 올해 공공시장 수주역량을 상반기에 집중한다.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축소로 공공공사 발주량의 감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총액 2조원가량 대형 기술형입찰공사 8건의 주인이 상반기 내에 가려지기 때문이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익성 문제 등으로 기술형입찰공사의 유찰이 흔해진 가운데, 다자 간 경쟁구도가 형성된 사업비 1000억원 이상 기술형입찰공사 8건이 상반기에 설계심의를 거쳐 적격사를 가린다. ▶관련기사 6면

이들 공사는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B-7블록 공공임대 건립(1390억원·이하 추정금액) △고속국도 파주~양주·포천 간 건설공사 4공구(1689억원), 2공구

(2238억원)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1공구) 축조(1903억원)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3234억원) △새만금 남북2축 도로1단계 3공구(3431억원), 4공구(1777억원) △울산신항 남방파제(2-2공구) 축조(3427억원) 등이다.

이들 공사는 입찰일이 이르르면 오는 13일(경북도청이전 신도시 B-7블록 공공임대 건립)에서 늦으면 5월18일(울산신항 남방파제 2-2공구 축조)이어서 상반기 내에 설계심의와 가격개찰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기술형입찰공사도 유찰이 흔한 일이 될 정도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쟁구도가 형성된 사업들이어서 입찰 참가사들은 수주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은 동해항3단계 방파

호안(1공구) 축조공사와 새만금 남북2축 도로1단계 4공구를 노리고 있고, 포스코건설은 새만금 남북2축 도로1단계 3공구와 울산신항 남방파제(2-2공구) 축조공사에 수주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은 각각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공사와 새만금 남북2축 도로1단계 3공구에 출사표를 던져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고, SK건설은 새만금 남북2축 도로1단계 4공구와 울산신항 남방파제(2-2공구) 축조공사의 수주를 노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올해 1조원 내외에서 공공공사 수주목표를 세웠다"며 "상반기 기술형입찰공사의 수주경쟁에서 어떤 성과를 얻느냐에 따라 연말 목표달성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준기자 newspia@

새만금 남북2축 도로 등 초대형 물량 4건 '4월 大戰'

(3·4공구)

뉴스 돌 보기

상반기 주인 찾는 기술형입찰은

상반기 설계심의를 거쳐 적격사가 가려질 1000억원 이상 기술형입찰 공사는 8건이다. 추정 금액만 총 1조9089억원에 달한다. 올해 SOC(사회기반시설) 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이번 기술형입찰 경쟁에서 승리한 건설사는 수주고를 발판으로 하반기에 한결 수월한 수주전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3월 초 첫 낙찰자나 올 1차전은 오는 3월 초에 승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B-7블록 공공임대주택 건립공사(추정금액 1390억원)가 2월13일 입찰 마감으로, 이르면 3월 초 낙찰자가 가려질 전망이다. 현재 계통 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참여해 2과정 구도를 그리고 있다.

계통건설 컨소시엄(포스코건설·동진·디에이지)과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성호·신광·대림)이 맞붙는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49% 이상 규정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가 두드러졌다.

파주~포천 도로 2·4공구 각 2과정 울산신항 남방파제 등 수주전 채비 업계, 상반기 시장 선점 역량 집중

연이어 고속국도 제400호선 파주~양주·포천 간 건설공사 4공구(1689억원)와 2공구(2238억원)도 2과정 양상 속에 낙찰자를 가린다.

4공구는 2월17일 입찰 마감으로 태영건설이 대림·계통·금성백조·대원건설산업·경우크린텍·씨앤씨중건·지아이와 짝을 이뤘다. 이에 맞서 한화건설은 KR산업·도원이엔씨·활림건설·우호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초대형 공사 집중된 4~5월 최대 승부처 4월 들어서는 수주전이 더 뜨거워진다. 초대형 공사인 새만금 남북2축 도로1단계 3공구(3431억원)와 4공구(1777억원)가 주인을 가리기 때문이다. 금액이 크다 보니 경쟁구도 역시 3과정으로 치열하다. 모두 4월18일 입찰 마감으로 설계심의를 거쳐 역시 상반기에 주인을 가린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이후 오랜만에 나온 기술형입찰

상반기 주요 기술형입찰 물량

공사명	추정금액	참여 대표사	입찰일
경북도청이전신도시 B-7블록 공공임대주택 건립공사	1390억원	△계통건설 △코오롱건설	2월13일
고속국도 제400호선 파주~양주·포천간 건설공사 4공구	1689억원	△태영건설 △한화건설	2월17일
고속국도 제400호선 파주~양주 포천간 건설공사 2공구	2238억원	△태영건설 △쌍용건설	3월31일
동해항3단계 방파호안(1공구) 축조공사	1903억원	△현대건설 △GS건설	4월11일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 공사	3234억원	△대우건설(예상) △대림산업(예상) △한양(예상)	4월12일
새만금 남북2축 도로1단계 3공구	3431억원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4월18일
새만금 남북2축 도로1단계 4공구	1777억원	△현대건설 △롯데건설 △SK건설	4월18일
울산신항 남방파제(2-2공구) 축조공사	3427억원	△포스코건설(예상) △SK건설(예상)	5월18일

방식의 대규모 토목공사인데다, 상대적으로 적정 실행확보 전망도 밝은 편이라 3과정 경쟁구도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3공구는 추정금액이 3431억원에 달해 상반기 기술형입찰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포스코건설이 주간사를 맡아 계통·활림·새천년종합·영도·산이·인성중건·미래도시·지아이와 팀을 이뤘다. 대우건설은 신세계·신동아·대원과, 대림산업은 금광기업·고덕중건·신흥·삼호·도원·경우크린텍·관악개발과 컨소시엄을

컨소시엄(관악개발·금도건설·삼보중건·신흥건설·동우개발·동진건설·명현건설)과 GS건설 컨소시엄(두산·대양산업건설·한진중공업·고덕중건)이 맞붙는다.

컨소시엄 구성 한창인 물량도 올해 첫 달 공고된 3000억원 이상 초대형 공사물량에 대한 수주전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단기(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나온 울산신항 남방파제(2-2공구) 축조공사(3427억원)와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공사(3234억원)다. 이들 물량 역시 상반기에 설계심의를 거쳐 낙찰자가 나올 전망이다.

현재 자리싸움이 한창인 가운데, 울산신항 남방파제(2-2공구) 축조공사는 포스코건설과 SK건설의 참여여부가 명확하다.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공사는 대형건설사와 중견건설사 경쟁으로 좁혀지고 있다.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이 각각 의지를 밝힌 가운데, 한양과 동부건설 등 중견건설사 연합팀이 대응하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되도록 상반기에 최대한 수주 물량을 쌓아놓자는 전략"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성준기자 newspia@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규정·유의사항 알아두세요”

조달청, 전국 8곳서 설명회

조달청은 조달업체와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월 8일 서울지방조달청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전국 8개 권역에서 개최된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물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MAS 관련 규정이 3월 1일 시행되기에 앞서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조달업체와 수요기관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은 지난 12

월 MAS 시장참여를 위한 인증획득 부담과 실적요건 등을 완화하고, 창업기업과 해외시장 진출 유망기업 우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백명기 구매사업국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이해를 돕고 계약체결과 관리 과정에서 유의사항도 자세히 안내한다”며 “중소 벤처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는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역별 설명회 일정과 참가신청 방법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상준기자

강원도, 지역자금 역외유출 증가 등으로 위기

경제 활성화 ‘3대 법안’ 입법 추진

(지역화폐·지역재투자·은행설립법)

강원도가 지역화폐법, 지역재투자법, 지역은행 설립과 지원에 관한 법 등 지역경제 3대 법안 입법 추진에 나섰다.

이들 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이다.

31일 도에 따르면 매년 강원도 내에서 생산한 부와 가치가 실시간으로 수도권 등으로 유출, 지역경제 침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2015년 도의 지역자금 역외유출 규모는 5조5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외지 건설사, 은행, 대형유통업체, 기업형 슈퍼마켓(SSM), 온라인 쇼핑 등이 지역 자금 역외유출 주요 경로다.

또한 한국은행 조사 결과 2014년 강원지역 소비자자금의 외지 유출 규모는 2조400억원으로 지출비중 46.6%를 차지해 2010년 38.4%보다 8.2%포인트 증가했다.

도는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지역경제 3대 법안 입법을 추진한다.

도, 강원발전연구원 등과 TF 구성 연내 입법 가능하도록 행정력 집중

지역화폐법은 지역 상품권을 화폐와 같이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 행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금액 3~8% 범위에서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강원상품권 구매를 각 업체에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상품권은 현금으로 한번 교환하고 나면 다시 사용할 수 없어 지역 내 결제회폐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도는 강원상품권이 지역에서 반복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지역재투자법은 기업이 지역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 자금 역외유출을 줄여 지역에 재투자하는 제도적 장

치를 위한 조치다.

지역은행 설립과 지원에 관한 법은 지역 순환형 금융시스템 정착을 위해 필요한 법이다. 국가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서민, 중소기업, 중소기업을 전담 지원하는 지역밀착형 지역은행 설립이 필요한 만큼 정부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앞으로 도와 강원발전연구원,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월 중 지역경제 3대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법안 입법 필요성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토론회와 함께 대통령선거 공약 반영을 추진한다.

최문순 지사는 31일 “현재 대한민국에서 극단적 경제 양극화와 빈부 격차 문제는 꼭 해결할 핵심과제”라며 “돈이 한군데로 모이는 구조를 깨서 분산하는 ‘지역경제 3대 법안’을 마련해 대선 공약에 반영토록 하는 등 올해 입법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